

53년 된 광주 도심 '애물단지'...옛 동구청사 어찌나

1971년 지어진 3층 건물, 철거도 매매도 못하고 노후화 방치 소유주만 20명 동의 못얻어...14년간 안전진단도 못해 불안

광주 도심에 있는 옛 동구청사가 건립 53년이 지나 안전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손낼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됐다.

집합건물이어서 광주시를 비롯해 소유자가 20여명에 달하고 미등기 소유자도 있어 소유자의 동의절차가 필수인 안전 진단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옛 동구청사(광주시 동구 금남로2가 7-1, 7-4)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옛 동구청사는 지난 1971년 591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건물이다. 현재는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등을 비롯해 일반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이 건물은 당초 1974년 광주시 소유였으나, 1991년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광주시 동구 소유가 됐다.

이후 1996년 동구청사가 옛 전남공고 자리로 옮겨갈 때, 동구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옛 청사 건물을 광주시에 대물변제해 1997년 4월부터 광주시가 관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전체 건물의 20%, 토지 30%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일부 호실은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소유주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문제는 건물의 안전이다.

광주시는 옛 동구청사가 50여년 세월을 견딘 건물임에도 최근 14년동안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으며,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노후한 건물임에도 관련법에 따른 의무 안전진단 대상도 아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건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별법)상 3층시설물로 지정된 바 없어 정기 안전진단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벗어났는데, 주소가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데다 각 건물이 연면적 3000㎡ 이하라서 정기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옛 동구청사는 가동(지하층), 나동(1층), 다동(2층), 라동(3층)으로 나뉘어 있으며, 건물 전면부(7-4번지)와 후면부(7-1)로도 나뉘어 있다.

7-1번지의 연면적은 가동 1035.24㎡, 나동 447.67㎡, 다동 588.97㎡, 라동 841.13㎡으로 총 2913.01㎡에 불과해 정기점검 대상에서 벗어났다. 7-4번지 또한 연면적이 가동 611.52㎡, 나동 286.45㎡, 다동 383.84㎡, 라동 474.82㎡ 등 총 1756.64㎡다.

이런 한계에도 광주시장 혹은 동구청장이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지난 31일 옛 광주시 동구청사(현 금남빌딩)가 53년 세월에도 안전진단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있으나, 소유자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한계에 봉착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는 동구 회계과에 건물 관리를 위탁해 매년 시비 2000~5000만원씩 개·보수(소방점검, 누수 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안전성 진단과 수리·보수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옛 동구청사의 안전문제가 심각해 수년 전부터 대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소유권 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입주업체들의 안전을 고려해 임대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했으나 영세한 업체들이어서 갈 곳이 없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영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님 건설분야 교수

"건물의 안전진단에 착수할 수 있다면 우선 전문기들의 육안점검이라도 해서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합건물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소유권과 무관하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조례와 정책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생후 2일 영아 살해후 쓰레기통에 버리고 법정 선 친모 선처 호소

"구조 생존 가능성 배제 말아달라"

생후 이틀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친모가 산후 정신관련 질환과 망상 등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지법 302호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열린 A(여·37)씨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이를 만에 길거리에서 영아의 코와 입을 막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의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상태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유일

한 증거는 A씨 진술뿐이고 아동의 사망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 "A씨가 산후 정신병이나 유산 이후 망상 등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어 유기 당시 아이가 숨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피해 아동이 유기 됐더라도 누군가에게 구조돼 생존해 있을 가능성 등의 합리적 의심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sbh@kwangju.co.kr

뇌물 받고 해외 도피한 전 광주시의원 자수

돈 받고 매입형 유치원 선정 개입

1년8개월만에...인천공황서 체포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한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이 1년 8개월 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1일 광주서부경찰 지능수사 2팀에 따르면 전남 캐나다에서 귀국한 최씨를 상대로 뇌물 수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의원인 최씨는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으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시교육청은 당시 40여억원을 주고 사건과 관련된 유치원을 매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이 유치원 선

정 관련 정보를 해당 유치원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출국 금지 및 여권 무효화를 시키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행방을 추적해 왔지만, 최씨는 필리핀과 캐나다에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최근 당뇨 등 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한국에 있는 가족과 상의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한국 시각) 캐나다 영사관에 자수의향을 밝히고,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과 도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에게 금품을 주고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여한 유치원 관계자와 시교육청 간부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최씨 사건이 속죄된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병합여부를 판단 한다는 입장지만 최씨의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기 이전에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0대 기초생활 수급자 홀로 숨진 채 발견

광주시 북구에서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홀로 숨졌다. 가족·이웃과 단절된 50대 남성이 숨진 지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택배기사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에 광주시 북구 한 원룸에서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기사가 "원룸 방 안에서 악취가 나는 것 같다"고 건물주에게 알려 죽음이 알려졌다.

경찰의 일차 부검 결과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이미 진행된 상태로 숨진 지 5~7일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침입흔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범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후원물품인 김치를 받기 위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으며, 일주일 전까지 집밖을 왕래하던 모습이 집주인에 의해 목격됐다.

지난 2021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A

씨는 술을 자주 마셨으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간 왕래도 없었다고 한다. 2년 전부터 이 원룸에서 세들어 살고 있던 A씨는 월세와 관리비도 수개월간 미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A씨가 지난 2022년 10월 중·장년 1인가구 전수조사 대상 등록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한 A씨는 1인가구임에도 위험군으로 관리 받지 못했다. 북구는 A씨 유족들이 시신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무연고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